



사진 출처: 국무총리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필요한 타협 중단하라

>> 관련 기사 6~7면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6~7면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2~3면

최저임금 등
노동운동 쟁점

11, 12면

이재용의 자유와
재벌 개혁 문제

8~9면

한·일 갈등 재개

4면

서평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5, 10면

온라인 기사

-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용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6월 11일 국회 앞에서 직접고용 합의를 촉구하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이정원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종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와 같은 우파 언론들의 부추김도 크게 작용했다. 우파 언론들은 이번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낳은 문제라며 연일 비난을 해 대고 있다. 통합당도 이 사안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 온 이 사회 지배층 인사들이 공정성 운운하고 청년들의 불만을 이용하려 나서는 것은 위선이다. 우파는 평범한 청년들의 조건 개선에는 관심도 없다. 그간 보수우파 정부들 하에서 청년실업은 높아져 왔고, 보수 정부들은 청년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 청년 탓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박근혜는 청년들을 다 중동에 보내라고도 했었다.

무엇보다 우파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차별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 온 자들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청년들은 처음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 자체가

꽤 줄어든다.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위선자들

결국 우파가 속 보이게 위선을 떠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자라난 불만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문제라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민층과 청년층에서 불만이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지난 3년간 정부의 개혁 이행이 너무 궤차되거나 배신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하락하는 것을 봐도 광범한 불만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해 봐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 수치일 뿐 필요한 인력 수준에도 못 미친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과로사 등 사망이 연이어 벌어지는 우체국에서도,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철도에서도 정부는 인력 충원을 한사코 거부했다.

공공부분 정규직화 공약도 파산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별하고 전환 방식에도 차등을 뒀다. 이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비정규직이 아예 제외됐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도 일부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다른 일부는 자회사 방식으로 나눠져 전환됐다.

뿐만 아니라 전환자들 대부분이 임금 등 조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할 직무급제가 도입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은 이번의 지저분한 논란은 정부가 일부만 정규직화 대상으로 삼고 차별을 유지해 각 부문 간 갈등과 논란을 부추긴 결과이다. 결국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민간부문 정규직화의 마중물이 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더 늘었다.

인천공항에서도 전체 비정규직 9800여 명 중 2143명만 직접고용(22퍼센트)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12월에 노사가 30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던 것에도 못 미친다. 이번에 직고용되는 보안검색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2017년 5월 12일)된 후 채용된 800여 명은 경쟁 채용 과정에서 탈락할 위험도 크다.

직접고용이 돼도 기존 정규직과는 구분되는 별도 직군으로 두고 임금과 처우는 자회사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직고용 규모든, 처우 개선이든 언론에서 자각적으로 다룬 내용들이 결국은 부풀린 숫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1호 사업장이자 상징이었던 인천공항에서의 정규직화는 기만적이었다.

이처럼 우파나 정부 모두 위선적이긴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문재인. 그 약속은 영터리임이 드러났다

‘정규직 기득권’ 공격은 하향 평준화만 낳는다

인천공항 논란을 두고 노동시장 내 격차 심화가 진정한 배경이라는 지적이 적잖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선 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하거나 끌어내려 절감한 비용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임금의 2배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겨레>에 칼럼을 쓰는 이강국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공정을 위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것은 철밥통 혹은 귀족이라 불리는 정규직의 기득권은 제한하고 문호는 개방하여 더 많은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다.”

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즐겨 해 온 주장이다. 사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부분적으로 이미 실행한 바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조건을 악화시켜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악화된 조건 회복 열망이 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이 희생하거나 공공부문 호봉제를 없애야 한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정부가 ‘공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우며 추진한 공공부문 직무급제는 비정규직 처우도 악화시켰다. 직무급제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직무급제는 비정규직 업무에 낮은 직무 가치를 부여하고는 그에 따른 낮은 임금(최저임

금 수준)을 정당화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역시 상향 압박보다는 하향 압박이 커지기 십상이다.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조건과 비교해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해 온 것을 볼 때, 기준점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는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격차가 존재하면서도 함께 등락을 해 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펴면서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노동을 이간질하며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

이간질

이간질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공공기관에 도입한 임금피크제 문제이다. 박근혜는 청년 채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게는 40퍼센트까지 삭감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청년 채용은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2퍼센트(1만 명)도 되지 않았다. 이처럼 공공기관 채용이 미흡한 상황에서 청년 실질 실업률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대신 삭감한 임금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며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임금 억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신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노동운동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각각 한쪽을 핑계로 한 양쪽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하향 압박만 더 커질 것이고, 개선은 없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목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뜻하는 바는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하향평준화 압박이 커진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추구할 제대로 된 격차 해소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격차 해소는 정규직 임금 삭감이나 억제가 아니라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속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 경쟁이 대안인가?

일부 청년들의 반발의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상황 악화까지 겹쳐 고용난이 심각해지고 편향은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하에서의 공정 논리, 즉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라는 접근은 커다란 맹점이 있다. 공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므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비롯해 수차례 벌어졌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단 허구적이다. 채용 시험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잡으려면, 좋은 대학에도 가야 하고, 알바 따위 하지 않고 학업과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미 부모의 사회·경

제적 조건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고, 노력할 수 있는 조건 자체에서 이미 유불리가 형성되므로 이에 따르는 결과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평등

그런데도 이 사회의 지배층은 시험 결과는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개인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긴다. 취업 실패는 청년 개인 탓이라는, 냉혹하기 짝이 없는 책임전가 논리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정부는 저질 단시간 일자리만 만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더 좁아졌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공정성 논리는 이 사회의 진정한 불평등은 가리고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적잖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이 되

는 현실을 봐도 공정성 논리는 서민층 청년들에게 이롭지 않다.

공채시험만이 만능인가 하는 물음도 던져 봐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에서 수년 동안 투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은 보상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컵밥으로 허기를 채우며 고시원에 수년간 살아야 하는 이른바 “공시생”들의 불운이 그들 탓이 아니듯,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꿈꿔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도 아니다.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차별 속에서도,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훈련을 받았고, 대부분 최소 수년 동안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기여하고 검증된 사람들이다. 오히려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차별을 받은 것이 문제였다. 이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정규직화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연대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노동운동의 대응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상당수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전환 방식(직접고용과 자회사 등)도 차이를 뒤 한계가 많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반목시킬 위험성도 컸다. 따라서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동력으로 삼아 요구를 쟁취하려 해야 했다. 당연히 정규직 연대도 함께 건설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개혁 의지’에 기대 협력과 교섭을 통해 성과를 내려 했다. 그래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부가 민주노총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고 후퇴가 역력해지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랬다. 정부와 척질 각오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만만찮게 투쟁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로 그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주장들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비정규직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진 시기에는 이런 주장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2019년 7월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을 벌였을 때, 여론의 지지는 상당했다.

요컨대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주장은 노동자 투쟁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오가 강력하고 사기가 높으면 투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투쟁으로 세력균형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야 보수적인 일부 정규직 노조 집행부나 일부 정규직의 반대도 약화될 수 있다.

세력균형

아쉽게도 지금 논란이 되는 인천공항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지부 지도부도 기층 노동자들은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음에도 투쟁보다는 교섭에 힘을 실어 대응했다.

이런 대응은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활동과 투쟁이 부차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노동자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지지부진한 교섭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제압할 힘도 약해졌다.

또한 교섭에 힘을 싣는 대응은 정부의 자회사 방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타협적인 태도로도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조건부 자회사 전환 방안을 교섭 카드로 올릴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노조의 추천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

안을 마련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제시한 방안은 자회사를 수용하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었다.

노조가 자회사를 수용한 이후에도 사측이 직고용 규모를 더 줄이고 전환자 처우 개선도 외면하는 압박이 계속 벌어졌다. 당시 사측과 교섭에 참가했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한국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 지도부들이 이런 후퇴에 합의를 해 줬다. 당연히 해당 노동자들은 격하게 반발했고, 이 중 일부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에 나서 최근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다시 얻어 낸 것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타협과 노조 지도부의 거듭된 후퇴도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뒀다는 점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관건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하고 이 속에서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펴 나가느냐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 논리나 정규직 책임론 등 각종 노동자 분열 이데올로기들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박할 수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혁명적 정치로 조직된 좌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2015년 정부의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기자회견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이현주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지난 5월 말 한국 법원은 강제동원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수출 규제 확대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6월 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며 제소 절차도 중지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사무총장 선거 도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는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가 WTO 제소를 주도해 온 것과 관련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미국이 G7을 확대해 한국 등을 참여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제국주의와 과거사 문제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자국의 위상과 개입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 F-35, 항공모함 등 공격형 무기 도입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후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일본이다.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그것의 군사적 공격성이 증대됐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과거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즉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심지어 일본 우익은 침략전쟁 과거사를 미화함) 과거 자신들의 전쟁 범죄 책임을 인정하는 건 곤란한 것이다. 한 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과거 일본이 침략했던 여러 아시아 나라를 자국해 책임 묻기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고, 그 나라들을 중국 포위 전략에 끌어들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즉, 일본 지배자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의 위신과 영향력을 회복·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과거사를 부정·왜곡하는 것이다.



공격성 더해 가는 미·일 동맹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제대로 맞서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사진은 6월 22일 적진 침투·공격용 첨단 전투기 동원한 미·일 '코끼리 걸음' 훈련 모습

최근 일본 정부가 “G7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며 한국·호주·인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도 일본의 국제적 위상 지키기와 관련 있는 듯하다. 일본은 서방 강대국 클럽인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지난해 한·일 갈등도 이런 배경에서 불거졌다.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서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다. 수출 규제 같은 보호 무역주의 수단을 이용해서 말이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지체시키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일본을 두둔해 왔다.

이런 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미국의 패권 전략과 그 중심인 미·일 동맹에 맞서야 함을 보여 준다.

최근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과 왜곡, 한국에 대한 강경 조처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부패 스캔들 등으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 있는 듯하다. 이를 통해 우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국민적 단결 기치가 노리는 효과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6월 29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관 혼연일체” 운운하며 ‘국민적 단결’을 호소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민·관이 단결해 대응한 덕분에 수출 규제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미

국 제국주의 반대와 결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경험은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처음에 문재인 정부는 언뜻 보기에 대일 강경 자세를 취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한편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급세 한계를 드러냈다. 얼마 안 가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하며 꼬리를 내렸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으로 문재인 정부는 미·일 동맹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기존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줬다. 이것은 일각의 과장처럼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식민지 종속 상태여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이 이 질서 안에서 나름의 이익을 얻고 대우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부차적 서열이긴 하지만 그 질서에 기득권이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질서에 걸린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서도 타협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준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파장을 억제하려 해 왔다.

그래서 올해 초, 법원의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를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 협의회 구성 제안을 지지했다. 이 제안은 협의회를 구성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 자산 매각 조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

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조차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그 전에도 여권 내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흐리는 타협안(문화상 안)이 제출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갈등 와중에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했다. 가령, 인도양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지난해 가을에도 일본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 선박 검색 훈련을 했다.

최근 출간된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지난해 4월 문재인은 ‘만약 북한과 싸우게 된다면 일본의 참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냐’는 트럼프의 질문에 일본 병력이 한국 땅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국민적 단결” 기치를 이용해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경제 침략” 운운했지만, 실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수출 절차를 과거보다 좀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지 아예 중단시킨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아주 신속하게 대처했는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려 수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어디까지나 기업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분업 구조 일부를 재편하는 과정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핑계로 노동시간 개악, 안전 규제 완화

등 노동자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청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소부장 시즌2 전략’을 두고 “첨단산업 중심의 강력한 혁신산업 제조클러스터 조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형 뉴딜’의 주춧돌을 놓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한·일 갈등과 코로나19·경제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또다시 규제 완화 등 개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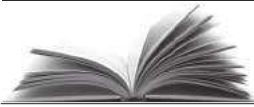
이처럼 지난해 경험은 일본에 맞서는 데서 문재인 정부를 결코 믿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은 남북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말미암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지난해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한·일 갈등 프레임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맞서야 하고 여기에 협조해 온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한·일 갈등을 빌미삼아 새로운 노동 개악을 하려는 시도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일 갈등, 이를 빌미로 한 포퓰리즘 활용, 노동자 공격 등이 모두 유례없는 경제 침체와 국제 질서의 불안정(안보 위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런 정치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추천 기사: 본지 294호, 김하영,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서평 |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이정구

2013년 《21세기 자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마 피케티가 이번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꽤 두꺼운 책(한글판은 1297쪽)을 출판했다. 불어판은 2019년 11월에 나왔지만 영어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3월에 나왔다. 코로나19가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빈부 격차를 더 벌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21세기 자본》이 사회의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려는 저작이라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폭로하고 그 체제를 옹호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통렬히 비판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장점 하나는 “이런 스펙타클한 변화들, 극단적 자산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들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전 세계 100여 명의 동료들과 힘을 모아 만든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world)에서 자료 대부분을 확보했다.

그 덕분에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이전 저작보다 훨씬 국제적이다. 《21세기 자본》이 서구 일부 국가들의 데이터에 기초했다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을 전방위적으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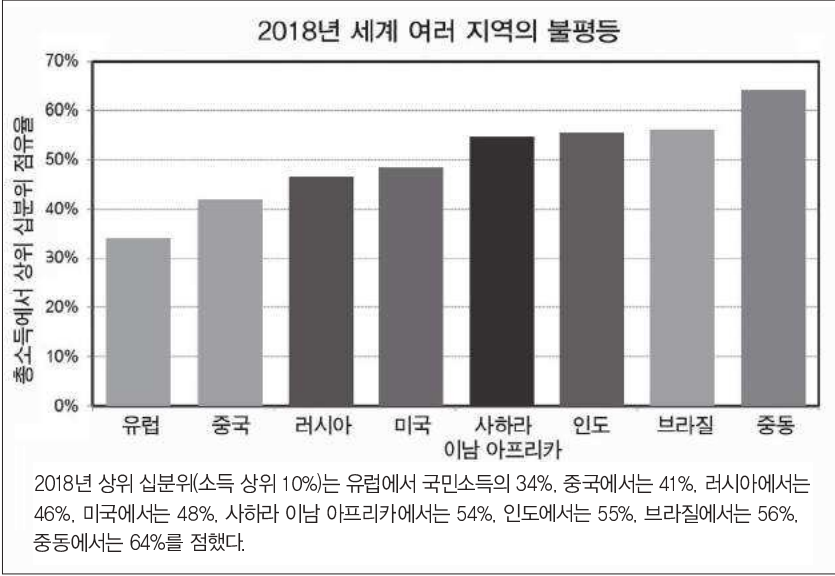
2018년 유럽에서 소득 상위 10퍼센트는 국민소득의 34퍼센트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41퍼센트, 러시아에서는 46퍼센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54퍼센트, 인도에서는 55퍼센트, 브라질에서는 56퍼센트, 중동에서는 64퍼센트를 차지했다(그래프 1).

특히 미국의 불평등 증가는 매우 극적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프랑스 등에 견줘 불평등 정도가 비슷하거나 덜했고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평균 2배가량 높았다. 하지만 2010년대에 미국은 전보다 훨씬 불평등해졌고, 생산성 면에서 과거의 우위도 완전히 사라졌다(그래프 2).

1980~2018년 불평등의 증대는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피케티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했던 서유럽에서나 “소유자 사회”가 위기에 처한 1914~1945년에는 불평등이 약화됐지만,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고 등장한 “하이퍼자본주의” 시대에는 불평등이 다시 증대했다(그래프 3).

정치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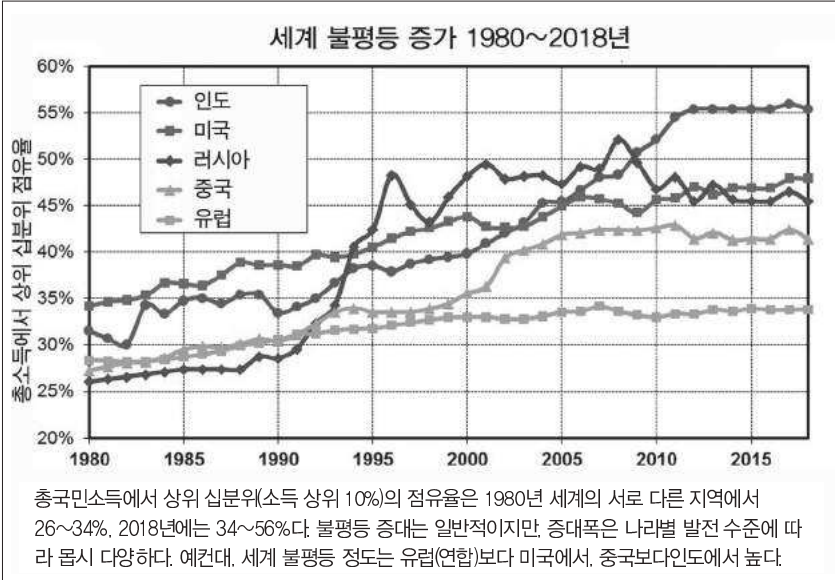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진 사회 불평등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고, 이데올로기가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피케티의 핵심 주장이다. 불평등이 소유자들의 정치적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정치



그래프1 《자본과 이데올로기》 39쪽



그래프2 《자본과 이데올로기》 581쪽



그래프3 《자본과 이데올로기》 38쪽

적 선택을 하면 불평등도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음을 함축한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없앨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소유와 기업 공동 경영 확대, 사유재산에 대한 누진소득세, 20억 유로 이상의 재산에 90퍼센트의 세율 매기기, 개인별 누진적 탄소세, 국제 금융 자산 등기부를 만들어서 자본 이동 통제하기 등,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이 방안들이 매우 급진적이란 점이 눈에 들어온다.

피케티가 제안한 또 다른 방안은 기본소득을 넘어서신 기본자본 개념(책에서는 “자본지원”으로 표현돼 있다)이다. 피케티는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옹호하지만 “여타의 모든 제도장치가 불필요해지는 일종의 기적의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기본

소득 만능론을 경계한다. “중요한 건 기본소득을 누진소득세·누진소득세·자본지원·사회국가를 포함한 보다 야심 찬 패키지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가난한 50퍼센트가 상당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면,” (토지를 재분배하는) 농지개혁 개념을 민간 자본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영구적 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사적 소유에 대한 누진세로 재원을 확보해 청년 각자에게 자본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일인당 평균 자산이 20만 유로 이기에 이것의 60퍼센트인 12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를 25세가 되는 모

든 청년에게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참여사회주의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에서는 그 만인 책이다. 하지만 그의 대안에는 약점도 있다.

첫째, 피케티에게서는 불평등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사적 소유를 옹호하고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할지라도 그 이데올로기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일 수는 없다. 피케티의 제안처럼 “인민계급”(노동자계급을 의미한다) 청년들에게 기본자본을 나눠 주고 부자들에게 누진소득세를 매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평등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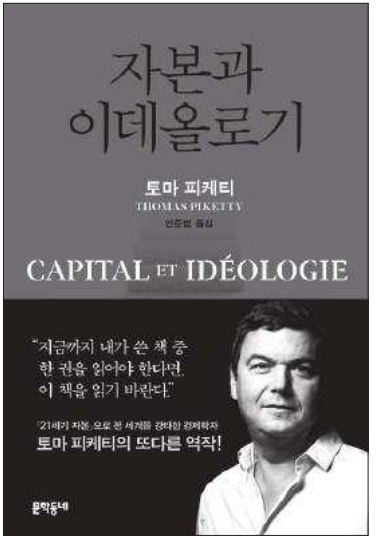
불평등은 대부분 교육이나 개인 능력,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한다.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노동 성과물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현실(마르크스는 이를 착취라 표현했다)을 바꾸지 못하면 사회 불평등은 온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부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매기면 분명 불평등이 약화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을 진심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이 착취를 없애지는 못하고 따라서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세금 부과는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착취”를 몇 차례 언급하지만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로 쓰지는 않는다.)

둘째, 피케티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 선택을 통해 “불평등주의체제의 신속하고도 급진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제시하는 정치적 선택은 의회주의적이다. 스웨덴을 예로 든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스웨덴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납세유권자 중심의 소유자 사회였으나 이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장 평등한 시민주의사회”가 됐다고 본다. 스웨덴이 “불평등주의체제의 전환에서 집단행동과 그 사회정치적 과정의 중요성을 훌륭히 입증해준 사례”라고 강조한다. 이때 “집단행동”은 “1890~1930년에 이례적인 인민 동원을 이끌어낸 스웨덴 시민주의 노동자운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케티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치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정치적 의회주의적 숙의”가 급진적 전환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해서 노동자 운동을 시민민주주의자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긴다. 또,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전후 장기호황이라는 드문 조건에서 노동자 투쟁이 강제한 결과였음을 못 보고 있다. (자세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지음,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1300쪽, 38,000원

한 내용은 스웨덴의 마르크스주의자 마테레이네 요한손이 쓴 본지 기사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참고하시오.)

피케티가 참여사회주의의 요소들로 제시한 강력한 누진적 소득세, 보편적 자본지원, 임금 노동자-주주의 의결권 균형 등과 같은 급진적 개혁은 의회주의적 방식으로서는 달성하기 힘들다. 자본가 등 권력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인데, 이들은 이윤 침해에 맞서 온갖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자본의 해의 도피나 심지어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주의적 대안을 추구하는 (좌파) 개혁주의 세력들은 이런 반발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집권 뒤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피케티는 중도 좌파 개혁주의 세력들의 실패를 지적하지만,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부담을 줄 경우 알량한 개혁조차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와 사적소유를 극복하고 참여사회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제도와 조세재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 내 권력을 더 폭넓게 분류분유하여 자본의 진정한 사회적 소유를 제도화”하고 “막대한 소유에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변화들은 훌륭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피케티는 자본주의와 사적소유는 물론이거니와 법률이나 조세제도를 바꾸는 데에서도 변화의 힘을 지닌 노동계급에 호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피케티는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 갈등이 계급투쟁의 주요 형태 중 하나임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런 약점은 피케티가 계급과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의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빈부 격차가 증대하고 경제 위기뿐 아니라 환경 재앙까지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실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일부 진지한 사람들에게 이 체제의 모순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주의자들이 토론과 논쟁에 개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몇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출간이 반가운 이유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이 글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쓰고 6월 25일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글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6월 18일)에서 정세균 총리는 건배주로 ‘동몽’(同夢)을 내놓았다. 그 청주의 명칭이 뜻하는 것은 “사람 사이 소름이 되고 하나가 되어 연결하는 꿈”이라고 한다(국무조정실).

그러나 노·사·정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5월 20일) 이후 줄곧 ‘동몽’이 아니라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어 왔다. 우선, 사용자 측은 이번 사회적 대화의 핵심이 기업 살리기라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유지된 다며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추가적인 유동성(자금) 지원, 각종 세금과 전기·시설 사용료의 유예 또는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원받는 기업이 해고를 못 하게 하자는 노동계 요구에는 뒷방귀를 뀌고 있고, 고용 유지를 위한 재원도 보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 측은 노동력 착취를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들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삭감,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 고용 위기를 이용해 임금을 깎고, 기업 사정에 따라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외면하고 있고, 상병수당 도입도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내뱉은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정부 기여(일반 회계)를 확대하지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임금 삭감,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점점을 놓고 확고하게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배구선수 김연경 씨의 연봉 삭감을 칭찬해 정부 측의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실 정부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이미 공공부문에서 착수한 상태다. 또, 탄력근로제 계약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에도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거듭 확대해 왔다.



6월 18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2차) 잠정 합의안은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 줬다.

착취 증대에 필사적인 사용자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된 지난 한 달 동안 이러한 정부·사용자 측 입장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4월 18일 정세균 총리와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비상협의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뻘질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을 만나 대화를 했음에도 말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흉남기 경제부총리, 성운모 산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과의 면담 결과를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했었다. “민주노총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식으로 말이다. 장관 면담을 보고하는 성명들은 대개 “노사정 간의 연대와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막들이 착각** 진행됐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명분으로 원격의료 도입에 탄력을 보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무성과급 도입과 수당삭감 공적이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의제를 띄워 포퓰리즘적 환심을 끌고는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후퇴한 법안을 내놓았다. 고용보험위원회의 사회적 합의(2018년)를 정부가 버젓이 어긴 것이다. 노동계가 반대해 온 노조법 개정안도 또다시 입법예고했다.

물론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런 문제들을 비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본질을 폭로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언제나 결론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기승전-대화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김명환 민

주노총 위원장이 스스로 말했듯이, 열세 차례 회의에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공전(헛된 진행)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고용과 소득 보장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사용자와 정부 측을 좋은 말로 설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 줬다.

지금 사용자들은 경제 침체와 세계 질서 불안정에 따른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전에 했던 양보마저 도로 뺏으려 필사적이다.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려면 그 어느 하나도 투쟁 없이 얻어 내기 어렵지 않을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로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정말로 기대했다면 순진하고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 이후 마치 사회개혁을 위한 전환의 계기라고 마련된 **양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냈다. 마치 그전 문재인 정부 2년의 기억을 모두 사실한 듯이 말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은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의 시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국가는 기업을 위해 돈을 쓸어모으며 그 대가를 노동자들이 아르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 위기 시기의 자본주의 국가 운영자로서 이런 방식이 확고하다.

이 점을 직시하고 폭로하기보다 오히려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적 연상을 구사하면서 정국 주도권 쥐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고,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수동화시키는 길이다.

양보안의 수혜자는 취약층이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공전은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방식은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에 따른 양보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런 방식은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런 방식은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런 방식은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음에도 사용자 측은 골짜기 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운동 일각에서 통용되던 주장, 즉 노동조합의 선제적 양보행위는 코로나19 위기와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 이후 마치 사회개혁을 위한 전환의 계기라고 마련된 양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냈다. 마치 그전 문재인 정부 2년의 기억을 모두 사실한 듯이 말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은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의 시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국가는 기업을 위해 돈을 쓸어모으며 그 대가를 노동자들이 아르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 위기 시기의 자본주의 국가 운영자로서 이런 방식이 확고하다.

이 점을 직시하고 폭로하기보다 오히려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적 연상을 구사하면서 정국 주도권 쥐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고,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수동화시키는 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선제적 양보안은 그 내용이 노동운동의 단결에 나쁜 효과를 미

친다는 점에서 **한층 심각하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 단결을 위해 고용주 기여분을 회피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양보안은 그 구명(원 자리) 메우기를 돕겠다는 것으로, 그 효과는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결국 취약노동자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도중에 의존하는 집단이라는 인상만 키우게 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규직 조합원 조건 지키기를 회피하고 기업과 정부에 양보하는 것에 그럴듯한 명분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 내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정규직 조건 지키기를 회피하거나 양보한 조치들은 결국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흔히 이어진다. 이것은 이번 양보안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계급 대립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양보안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계급 대립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양보안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계급 대립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양보한다면, 그것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 아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무임승차하지 않고 제 몫의 보험료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재원 문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실

정도는 정에서 한층 심각하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 단결을 위해 고용주 기여분을 회피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양보안은 그 구명(원 자리) 메우기를 돕겠다는 것으로, 그 효과는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결국 취약노동자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도중에 의존하는 집단이라는 인상만 키우게 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규직 조합원 조건 지키기를 회피하고 기업과 정부에 양보하는 것에 그럴듯한 명분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 내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정규직 조건 지키기를 회피하거나 양보한 조치들은 결국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흔히 이어진다. 이것은 이번 양보안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계급 대립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합의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다. 또 다른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조건 악화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의한 양보와 관계있음을 알게 되면서 민주노총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계급 대립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투쟁을 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미 시간을 많이 까먹었다. 그러는 동안 개악이 진척됐고, 세력은 정규직 노동자와 취약노동자들이 단결해 공동의 적인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취약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이다. 취약노동자들은 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싸움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투쟁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대를 제공할 수 있다.

투쟁을 지리매김 하려 해서는 안 된다. 투쟁은 단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투쟁은 협상을 위해 수위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 힘있게 전개되거나 탄력이 붙기 어렵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김하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진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볼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미흡하고 아쉽다”(김동명 위원장)면서도 합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역대 정권마다 배신적인 노·사·정 합의를 하는 데 이끌린 우파적 노조 관료(집합명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줬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와 사용자 측이 요구한 각종 계약에 합의해 준 바 있다(2015년 9·15 노사정 합의).

전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덕분에 한국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타협을 대내외에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었다. 자신의 양보가 노골적인 계급 협조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연대라고 말이다.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처럼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대화 테이블 바깥에서 투쟁할 때는 그런 포장이 먹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요구 외면한 잠정 합의안

사회적 대화 제의와 선제적 양보안을 이견 없이 결정했던(각각 4월 16일과 6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최종 합의안 단계에서 균열을 드러냈다. 상당수 중집 성원들은 합의 내용의 불충분함과 위험성을 이유로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이 의미있다”며 맞서고 있다.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라며 “그것을 믿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국민고용보험제, 상병수당은 잠정 합의안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 요구들은 위기 시 내리게 하려 한다. 정부가 ‘견해 차이’를 지키겠다며 민주노총이 핵심 의제대로 제시한 것들이다. 그러나 ‘노력’하거나 ‘논의’해 나간다는 두루뭇술한 진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실질적 저항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 문제도 돌아보면서 정치적 교훈을 얻고 운동의 해산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은 분열을 극복하고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의 생계소득을 보장했더니, 오히려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휴업수당 삭감의 길을 열어 줬다. 기업이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셋째,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고만 돼 있다.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사각지대를 해소할지 아무 약속도 없다. 게다가 고용보험 확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한 것도 문제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거론하며 “고용보험 적용이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넷째,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만 돼 있다. 지난 시기의 시급한 요구인 ‘상병수당’ 도입은 사실상 요원하게 미뤄진 셈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상징조작에 말려들지 말자

이처럼 민주노총의 요구는 모호한 문구로 처리되거나 무시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측의 협조는 잠정 합의안 전반에 걸쳐 매우 강조돼 있다.

“국난에 준하는 위기를 맞아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노동계는 ...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원만한 교섭 타결에 최대한 노력한다.”

사실, 노사정 합의의 세부 항목들보다, 그것이 정치적 상징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정부 측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계급 협조라는) 상징 말이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의 합의를 이용해 노사협조주의를 직접 현장 차원에서 뿌리게 하고자 한다. 정부가 ‘견해 차이’를 지키겠다며 민주노총이 핵심 의제대로 제시한 것들이다. 그러나 ‘노력’하거나 ‘논의’해 나간다는 두루뭇술한 진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실질적 저항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국민고용보험제, 상병수당은 잠정 합의안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 요구들은 위기 시 내리게 하려 한다. 정부가 ‘견해 차이’를 지키겠다며 민주노총이 핵심 의제대로 제시한 것들이다. 그러나 ‘노력’하거나 ‘논의’해 나간다는 두루뭇술한 진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실질적 저항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 문제도 돌아보면서 정치적 교훈을 얻고 운동의 해산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은 분열을 극복하고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잠정 합의가 “의미있다”거나 “취지에 맞다”며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강조한다. 지금 합의안에 반대하거나 협상에서 이탈하면 어렵게 살려 낸 대화 모멘텀을 잃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설사 민주노총이 제안한 대화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대화이므로 판을 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일단 시작한 잘못은 잘못임이 드러나도 계속해야 한다는 말밖에 안 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화에 기댄 수밖에 없는 불리한 계급 세력관계가 아닌데도 ‘기승전-대화’로 일관하며 투쟁할 시간을 허비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도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면 개혁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특히 총선 이후 키워 왔다. 잠정 합의안의 형편없는 내용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대화에 기대를 걸어 온 기존 방침에 대한 180도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난감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해답

현재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 상당수는 노사정 잠정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잠정 합의안 일부 항목을 고치자는 것인지, 폐기하자는 것인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남아 협상을 이어가자는 것인지, 나와서 싸우자는 것인지라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예초 중집 성원들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의와 양보안을 모두 지지한 데다, 노사정 합의 이후 산별·지역별 로 이어질 대화에 이해관계가 있다(참가 주체로서)는 점도 이런 태도에 영인식을 함께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호호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를 단호하게 밀어붙이려는 김명환 위원장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쉽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부와 사용자 측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노사정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계급의 양보만을 구할 뿐이다. 지금 같은 심각한 경제 침체에 노사정 대화로는 노동자 조건을 절대 지킬 수 없다. 장관들과 부처자주도부가 “노사정 대화”라는 말을 점점 공공연회 쓰고 있는 것도 그런 분위기에 조응해 일조할 수 있다.

그러서 이런 합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는커녕 사용자 측에 협조해 노동자들이 양보할 것을 압박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 그럴 때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쉽다.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력자들

강동훈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불법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주들과 우파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대법원 판결과, 삼성그룹 차원에서 증거 조작·은폐 등이 벌어졌다는 점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6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회계조작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이미 6월 9일, 담당 재판부는 이 건에 대한 이재용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비록 결론은 증거가 확보됐으니 구속이 필요없다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이처럼 범죄 증거와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해 노골적으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자, 우파 언론들도 검찰을 비판하며 이재용을 옹호하고 나섰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이재용을 가혹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 입증됐다고 말이다. 이들도 수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대형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크게 휘청”이게 뒤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증거 많으니 구속 불필요?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것은 수사심의위와 우파 언론만이 아니다. 그동안 사법부도 이재용 구하기에 열심이었다. 6월 9일 구속영장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을 은폐하려다 들롱 난바 있다. 파일 2100여 개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고,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아래에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을 묻은 게 발견되기도 했다. 향후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이재용에게 국정 동반자 대접을 해 주고 있다

이 매우 큰데도 법원은 이재용을 보호하려고 불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도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의 혐의 중 아주 일부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 준 바 있다. ‘재벌 총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관례’가 있는데, 그보다도 낮았다.

물론 대법원은 이재용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더 많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도록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 재판부는 독단적으로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용된다면 감형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즉각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 5월에는 이재용이 기만적인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용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는 문재인 정부도 계속 보냈다. 말로는 ‘적폐 청산’, ‘재벌 개혁’을 내세워 왔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기업주들을 초청할 때마다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반드시 초청했다.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풀려났고, 오히려 국정 동반자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서 언급된 이른바 ‘3대 신성장 산업’은 삼성의 핵심 계열사들과 관련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 바이오헬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차는 삼성SDI를 뜻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미중 갈등 등의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재용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지배계급 대다수도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재용의 부정 정도는 덮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이재용의 부정부패가 박근혜와 그 최측근들의 부패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적정선에게 끊어내는 게 쉽지 않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지배자들은 온갖 꾀수와 궤변으로 이재용을 구원하려 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런저런 재벌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사소한 재벌 개혁에도 실패해 왔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 총수들이 막대한 투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런 결정들에 따라 다른 많은 기업들과 국가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재벌 개혁 가로막는 검찰 개혁?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과잉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견제한다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설치한 기구이다. 바로 이 기구가 이재용에 대한 처벌을 견제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선정에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의 면면이나 회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에 폭로된 바를 보면, 이재용 수사 중단 논의를 주도한 자들은 노골적인 친삼성 인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은 없다”거나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여러 매체에서 해 왔는데도, 이번 수사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삼성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성균관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심의위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과 정의당, 참여연대 등은 수사심의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정치인들과 정치단체들은 대부분 이재용 등 재벌 부패 수사력을 약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 왔다.

우파들은 ‘너희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의 결정도 무시할 것이냐’며 이런 모순을 추궁한다. 물론 얼마 전까지 ‘검찰 개혁에 반대해 온 자들이 수사심의위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공세도 결국 정략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친재벌적 결정은 검찰 권력의 분산을 지향한다는 검찰 개혁이 사실 지배계급의 상이한 부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권력 분산일 뿐, 검찰을 민주적 기관으로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 298호에 실린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는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재벌 개혁은 적절한 요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이재용 편을 드는 재벌들과 다수 기성 정치인들, 국가 관료들을 보면서 분노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재용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그룹 승계를 추진했는데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는 계급 불평등 문제다. 이재용은 처벌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삼성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쌓은 막대한 부를 회수해 노동계급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다.

이 때문에 재벌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민주노총도 6월 24일 '먹고 살자 최저임금! 재벌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전태일 3법 제·개정 등과 함께 '재벌의 공간(사내유보금)'을 열어 노동자 민중을 살려라'를 주요 요구로 내놓았다.

물론 매년 수십조 원씩 쌓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그러나 재벌개혁론은 재벌의 소유 구조를 주로 문제 삼는데,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는 재벌을 가능한 날개의 기업으로 떼어 놓자는 것이다. 그룹 경영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주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6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용의 불법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사건"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적은 지분을 갖고도 그룹 전반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사익을 추구하여 회사 및 주주, 노동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마르크스도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며 사익을 편취하는 일은 흔히 벌어진다. 그러나 참여연대처럼 주주와 노동자를 한데 묶는 것은 노동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노동자 처지에서 보면, 재벌 체제보다 주주 중심 체제가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재벌 개혁론자들은 민영화된 KT를 모범적인 지배 구조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KT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동자 수만 명을 해고했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실적 압박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졌다.

그래서 재벌 개혁은 수만 명의 금융 자산가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재벌 개혁은 공상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마르크스는 "축적을 위한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이 "자본의 집중과 집중"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수의 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자본 축적의 법칙이다.

실제로 재벌 개혁이 경제적 집중도



대자본을 소자본으로 쪼갬다고 더 진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독점 국민(민중) 연대·연합은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6월 2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를 완화시킨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훨씬 못 미치는 걸치레 재벌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나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강화됐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재벌을 해체했지만 곧 또다시 대기업집단이 등장했다.

그래서 재벌 개혁 시도는 자본의 집중을 해소하는 것보다 비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흔히 기운다. 그래서 재벌개혁론자들은 노동자들이 비(非)재벌 자본과 연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끌리기 십상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의 이해관계도 노동자의 이익과 충돌한다. 중소기업들은 재벌 계열 대기업과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재벌과 함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착취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재벌뿐 아니라 자본 자체에,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계급 간 협력

당장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해고 금지, 전국민고용보험, 최저임금 1만 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전태일 3법 제·개정 등을 달성하려면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싸워야만 한다. 이윤 우선 논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면서 중소

기업 노동자들에 자신의 기업주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점에서 재벌 개혁 운동은 노동계급이 단결해서 계급적으로, 일관되게 싸우기 어렵게 만드는 논리를 담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과도 협력해 기업 살리기에 수백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을 지켜주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재벌의 공간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마지못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들려면, 체제 자체의 보존을 위협하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노동자 대중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역사상 경제 대침체기의 개혁은 혁명적 또는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었다.

이런 때에 재벌 개혁을 내세워, 이윤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고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특히, 파업)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재벌들로부터 미미한 양보 얻기도 어렵게 만든다. 계급을 초월해 국민적(민중적)으로 단결해 재벌에 맞서자는 생각은 형식적으로 보면 연대를 확대해 힘을 강화하는 방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적인 비재벌 동맹자들을 이반시

키지 않고자 노동자들이 일정 수위 이하로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재벌로부터 양보도 제대로 얻어 낼 수 없게 만든다.

자본주의 반대

재벌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재벌과 그 하청기업에 고용된 정규직 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갖고 있다. 이것이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정규/비정규, 내국인/외국인, 여성/남성 노동자들이 연대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재벌의 이윤에 타격을 주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투쟁은 비재벌 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과 투쟁에 나서는 데에도 고무와 영감을 줄 것이다.

결국 이재용 등 부패한 재벌 총수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거대한 운동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이재용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도 이를 보여 준다. 당시 1차 영장이 기각되자 그다음 쫓불집회 참가 규모가 갑절로 늘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성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보여 주고 있듯이, 재벌과 친구인 문재인 정부를 개혁 동반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독점 국민(민중) 연대·연합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개혁주의적 운동일 뿐이다.

실질적인 개혁을 얻어 내려면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거대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운동이 상당한 개혁을 성취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질적으로 도약하고 있을 때일 것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 ★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 미국을 뒤흔든 인종차별 반대 운동 앞에 놓인 것
- ★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 ★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 ★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 코로나 위기에 '엮힌 데 덮친 격' 되나
- ★ 우파 청년들의 대자본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 ★ 례메시비르 한국 공급 시작 —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 ★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구조조정 중단하라
- ★ 정의당,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발의
- ★ 장학금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서평 |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이언 버철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사회당·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했는가?

김인식

저자 이언 버철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이언 버철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어떤 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향력과 탄력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경쟁자들[공산당]이 쇠퇴했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해야 할 독특한 정치적 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 책은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역사를 살펴 보면서 그들의 탄력성과 반동적 구실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쓴 것이다.”

훌륭한 책이다. 이 책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서독에 집중하지만, 소련 블록 밖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전개된 상황도 다룬다.

이 책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출판됐지만, 지금 한국 정치 현실에도 마침맞다. 한국에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정의당)과 스탈린주의 정당(진보당)이 존재한다. 물론 두 정당은 유럽에서처럼 집권은커녕 아직 그 문턱에도 못 갔다. 그럼에도 한국 노동계급 정치 세력 가운데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정당들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곳에서 두 정당의 정책과 실천의 내재적 논리와 부침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큰 영감을 얻었다.

사회당·공산당의 자본주의 ‘정상화’ 노력

1944~1945년과 그 직후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회당)과 공산당이 대거 부활했다. 유럽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급진화한 덕분이었다.

곳곳에서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났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좌파적 연사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실제 정책은 최대한 빠르게 자본주의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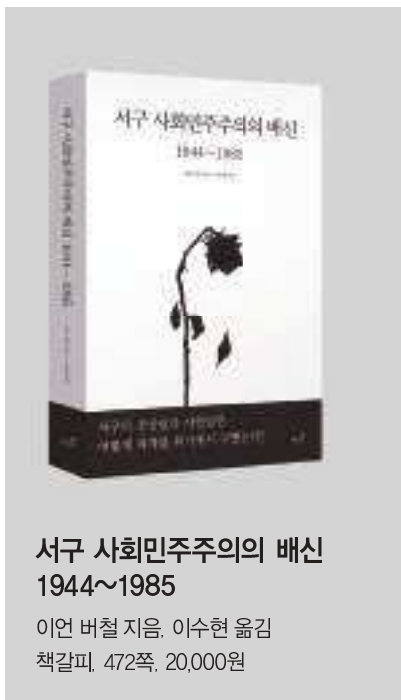
이 당시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당이 집권했고, 보통 공산당도 포함된 연립정부 형태였다.

1945년 10월 프랑스 제헌의회 선거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이 대승했다. 두 당의 득표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두 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302석(총 586석)이었다. 두 정당만으로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신생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인 민중공화국운동(MRP)을 연립정부에 끌어들었다. 사회당이 공산당하고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위험 부담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나치 점령에서 해방된 직후 크게 산산조각 나 있던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긴축 정



사회민주주의 의사가 자본주의 환자의 패인을 빌며 치료하고 있음을 풍자하는 만평 (이 책의 영어판 표지 그림. 영어는 한국어로 바꿈)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이언 버철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472쪽, 20,000원

책(공공지출 삭감, 세금 인상,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등)을 주도했다. 특히, 식민지 정책이 끈적했다. 1945년 알제리의 민족주의 봉기를 탄압했고, 베트남에서도 프랑스의 지배에 반대하는 저항을 짓밟았다.

좌파적 연사와 꽤 광범한 국유화 조치)를 쓰며 이런 일들을 했다. (나중에 프랑스 사회당 사무총장이 된) 기 몰레는 1946년 7월 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이 조직화와 선전, 대중 속

으로의 침투라는 필수적 임무를 무시하고, 활동을 의회와 정부로 제한하고, 해방 이후 정치적·전술적 실수들을 저지르게 된 것은 당내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때 “무시”라는 말뜻은 더 크고 더 잘 조직된 프랑스 공산당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난 사회당 지도부의 두려움을 가리켰다. 프랑스 공산당은 사회당과 매우 똑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얼마 가지 않아 바뀌었다.

냉전의 영향

제2차세계대전은 세계를 재분할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승전국들의 사이가 틀어졌다.

미국은 마셜 플랜(미국의 전후 유럽 부흥 계획)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이용해 유럽(서유럽과 동유럽 모두)을 지배하고자 했다. 소련은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과 바르샤바조약으로 대응했다.

냉전이 시작됐다. 사회당은 미국 진영에 줄을 섰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영국 노동당이 제1선에 나선 냉전의 전사였다. 영국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토에 가입했다. 다른 사회당들도 곧 뒤를 따랐다.

사회당은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언

버철은 이렇게 썼다. “노골적 빨갱이 탄압에는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모종의 ‘좌파적’ 반공주의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당들은 급속하게 우경화했다. “사회주의 혁명”이니 “마르크스주의”니 하는 얘기는 이제 사라졌다. 1947년쯤 공산당은 여러 정부들에서 쫓겨났고 어느 정도는 좌선화했다.

냉전은 유럽 노동계급 운동을 친(親)모스크바 진영과 친(親)서방 진영으로 양극화시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미국이 기존 노조 총연맹으로부터의 분리를 후원했고 그 결과 또 다른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조합 연맹들이 생겨났다. 1948년 프랑스에서 친미 우파가 노동조합총연맹(CGT)에서 분열해 나와 노동자의힘(FO)을 만들었다. 이탈리아 주요 노총인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CGIL)에서도 두 차례 우파적 분열이 일어나 노동(조합)연합(UIL)[사회당 계열]과 이탈리아 노동조합연맹(CISL)[기독교민주당 계열]이 결성됐다.

국제사회주의경향처럼 원칙적인 국제주의 입장 — 워싱턴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사회주의 — 을 지지한 사람들은 극도로 고립됐다.

무엇보다, 반동적인 사상들이 득세

했다. “1950년대 초가 되자 자본주의를 위해 임무를 완수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폐기 처분당했다. 이후 10년은 우파가 득세하는 시기였다. ... 그때는 개혁주의자들에게 암울한 시기였다.”

개혁주의의 탄력성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격화된 군비 경쟁으로 인한 장기 호황 덕분에 오랜 시간 조직된 좌파의 만만찮은 위협이 대체로 차단됐다.

스탈린주의의 저성장 위기가 사회당의 경쟁 세력인 공산당을 약화시켰다. 이탈리아는 예외적이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유력한 개혁주의 정당으로 변신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멈출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자, 체제는 다시 한 번 사회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구실을 필요로 했다.

“스탈린주의가 파산하자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중재하는 근본적 임무는 사회민주주의가 맡게 됐다. ... 노동계급이 만들었지만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야말로 ... 최상의 조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배계급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이상적인 집권당으로 여긴다는 말은 아니다. ... 부르주아지에게 알맞은 체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대안이 위기의 해결책으로 남아 있는 그런 체제다.”

그리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 전 반부 동안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여러 번에 걸쳐 영국·아일랜드·프랑스·서독·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에서 집권했다.

이 책은 이 물결이 쇠퇴하는 시점에서 끝난다. 그 뒤 1990년대 중엽 유럽에서 우파 정당들이 곤경에 처하자, 다음 차례를 기다리던 사회당들이 다시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대거 집권했고,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다 대중의 실망과 분노를 사 선거에서 패배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다. 그 뒤 그리스에서 긴축 반대 투쟁이 상당 수준으로 고양된 덕분에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시리자)이 집권했지만, 얼마 못 가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처럼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니 급속하게 여느 평범한 개혁주의 정당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목격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사라지거나 끝나지 않았다.

이 책은 오늘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리고 술술 읽힌다. 이 뛰어난 책도 믿고 읽는 번역자의 훌륭한 번역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 오래 전 많은 독자들의 독해력을 몹시 괴롭혔던 한 출판사의 번역본을 기억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잊으시라.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신정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실효성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측정한 업무 강도를 기준으로 퇴직자와 병가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집배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실제로 경기·인천 지역은 올해 159명의 채용 인원 중 15명의 발령을 보류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여유 인력”이 194명이나 된다며 퇴직으로 빠질 40여 명을 제때 충원하지 않고 있다.

집배 노동자들은 한 해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올 만큼 장시간·중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늘어난 택배 물량에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등기 배송, 지역 보건소 마스크 등기 배송, 긴급재난지원금 배달(대구 지역) 등으로 업무가 더 늘었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올해에는 폭염일이 늘어나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기가 훨씬 고될 것이다. “여유 인력”은커녕 당장 증원이 절실하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 시스템

이번에 우정본부가 “여유 인력”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살인 업무 강도 시스템”으로 악명이 높다.

이 시스템은 우편물 배달 과정의 각 업무별 ‘표준시간’을 만들어 업무량과 강도를 측정한다. 편지 한 통 배송에 2.1초, 등기 한 통에 28초, 택배 한 통에 30.7초 등으로 표준시간을 잡고,

집배원의 노동을 기계처럼 계량화하고 집배원을 옥전다.

우정본부는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업무 강도를 계산한다. 업무 강도가 1이면 하루 8시간 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1 미만이면 “여유 인력”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한다. “제가 초과근무를 2시간 더 해서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데 업무 강도가 0.8로 나옵니다. 0.8이면 8시간도 안 걸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업무별 표준시간은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조병일 집배노조 경인지역본부장)

오죽하면 같은 정부기관인 감사원도 2018년에 이 시스템이 업무량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정 노사가 참여하고 청와대가 주도해 구성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도 이 시스템이 인력 산출의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권고했는데, 우정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우체국은 개인별 업무 강도 지수를 게시해 집배원 노동자들 간에 경쟁을 부추기고, 관리자들도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강도를 높이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김밥을 들고 뛰어 다니면서 먹고, 아예 점심을 거르는 집배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2012년에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집배 노동자 18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뒤에서 칼 꽂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는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돼 구조조정을 추진하



얼마나 더 죽어야 멈출 텐가 지난 10년간 집배 노동자 184명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6월 17일 구조조정 반대 전국집배노조 기자회견

고 있다.

지난해 우정본부는 늘어나는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인력 구조조정 등 다양한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을 파기하고 그중 일부를 비정규직인 위탁택배원으로 대체했다.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막겠다고 오하려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소형 우체국 폐국, 정규직 업무 아웃소싱 등도 추진해 왔다. 이런 조처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소형 우체국 폐국이 추진되자,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우체국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되거나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を 겪고 있다.

올해 우정본부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를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각 우체국별로 집배 업무 강도를 진단해 업무 강도

에 따라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고, 업무 강도가 낮은 곳의 인력은 전환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인력을 늘리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올라가는 조처인데다, 전환배치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업무를 익혀야 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숨이 턱까지 찼다가 [위탁택배원 증원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을 사용해 정원 회수나 인력 재배치를 한다는 게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김현우 집배노조 동대구지부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원와 인력 재배치가 노동강도 증가는 물론, 장차 정원 감축(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측은 업무 강도에 따라 우체국 간 인력을 맞추면 집배원들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정원이

줄어든] 우체국으로 보면 인원 감축이 예요,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업무 강도를 근거로 인력이 남는다고 구조조정으로 갈 수 있어요.”(조경훈 인천 계양우체국 집배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 적자가 늘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 예산을 10퍼센트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비용 절감 압박은 커질 수 있다.

대면 업무가 많은 집배원들은 자기가 ‘슈퍼 전파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이어 구조조정까지 시도하자 노동자들은 “뒤에서 칼을 꽂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집배노조는 인력 재배치 철회, 구조조정 철회, 정규 인력 충원, 업무 강도 시스템 폐기를 요구하며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규직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정부가 그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임미영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직2국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채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달리 대구시는 공무원, 교직

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B씨는 임기제공무원이 계약직이니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얼마 전 부당 수급이니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부당 수급자 조사를 이유로 대구시 감사실의 소환 통보까지 받았다.

B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일해 표창장도 받았지만 2년 후 계약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입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공무원

이니 지급 제외라는 게 말이 되나요? 감사실 강제 소환까지 당해야 하는 고초를 겪어야 하네요. 제가 정규직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는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금 선별적 지급과 잘못된 행정을 규탄하며 환수한 긴급생계지원금 재지급을 요구했다. 대경본부는 대구시 향의 면담에 이어 7월 1일 규탄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대구시는 공무원노조가 나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로부터 환수한 긴급생계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긴급생계지원금 수령 정당하다” 7월 1일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기자회견

비상근무 수당 미지급

한편, 경남 창원시의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종합상황실 근무 등 비상근무를 하고도 임기제라는 이유로 비상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들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비상근무에 임기제를 제외했어야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에 예외 없이 일하고 있는 서울의 C보건소

임기제공무원도 “코피를 쏟으며 일한다. 비정규직이지만 맡은 업무 중요도도 높고 정규직 공무원이 대체 불가능한 영역도 많다” 하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일 시킬 때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처럼 취급하지만 정작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와 고용 안정을 요구하면 나몰라라한다.

공무원노조는 비정규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차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부당한 차별에 맞서야 한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양호영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6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사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정 업종들은 최저임금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차등 적용은 부결됐지만 사측 위원들은 “올해 힘들다면 제도개선위원회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차후에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거듭 개악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이런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최저임금 개악안이 21대 국회에 6개나 상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도 경영계 편을 들며 최저임금 억제에 군불을 때 왔다. 이제갑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경영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경제부총리 홍남기도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자면서 정작 최저임금은 억제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위선을 보여 주는 또 다른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2021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내놨다(월 225만 7702원). 기존 8590원에서 25.4퍼센트 인상한 액수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철회하고 산입범위를 원상 복구할 것, 15시간 미만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민간부문·공공기관 경영자 최고임금제 등을 요구했다. 그리



코로나19로 처지가 더 악화된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절실한 요구다. 6월 2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고 국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는 모두 지지할 만한 요구들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요구안이 “국민의 눈높이와 안 맞다”며 경영계의 비난을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분석해 산출한 실태생계비에 기초한 것이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224만 원이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삶과 필요에 근거해 산출한 최소한의 액수인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필요를 중시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안을 낮추라는 압력을 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최근 양대노총은 요구안을 조율해 1만 원 요구를 제시했는데, 사용자들이 삭감안을 꺼내며 강경하게 나온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기존 요구안에서 후퇴한 건 아쉬운 일이다.

이 시국에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취업자 중 무급이나 유급으로 휴직한 사람도 1년 전보다 126만 명이나 급증했다. 소득 감소로 인해 적금 해지, 보험 해약, 대출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최하위분위(1분위)의 노동소득은 53만 원에서 51만 3000원으로 심지어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도 매우 불충분했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0퍼센트대로 인상돼 경영계가 반발하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 나서, 2020년 최저임금은 2.87퍼센트라는 최악의 인상을 기록했다.

또한, 2018년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기존에 따로 지급하던 상여금·복리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였다. 기업주들은 실제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인상을만 맞추는 꼼수를 쓸 수 있었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은 실질임금 하락을 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상을보다 주휴수당 의무화, 산입범위 확대 철회 등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대폭 인상과 제도 개선을 대립시킬 까닭은 없다. 산입범위 확대도 지난 2년간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자영업자 도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대거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얼마간 과장된 면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운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입에 압박을 받고, 그래서 임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해고를 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서 자영업자에게도 이익만 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일면적 주장은 상이한 두 계급에 대한 포퓰리즘적 감싸기이지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

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경제 위기 시기에는 이런 대립이 더 첨예해진다.

물론 자영업자가 노동계급의 적은 아니지만, 노동계급인 것도 아니다. 노동계급이 자영업자의 지지(정확히 말해 묵종)를 끌어내려면, 두 계급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감언이설을 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 맞설 힘과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 고용을 축소해서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들도 있다. 6월 10일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일자리 사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임금과 같은 열악한 조건은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일자리와 조건 개선 둘 다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들은 이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감안하자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다수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법적 강제성이 있는 최저임금의 존재는 생계의 최저선이다.

노동자들이 고통분담 논리를 받아들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면, 오히려 기업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부추길 것이다. 이는 되레 고용조차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압박이 된다.

경제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임금과 고용 모두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안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권준모 현대중공업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 소위원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의 위협했던 추가 중징계를 끝내 하지 못했다. 김경택 대의원과 그가 속한 5분과 대의원회가 징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합이 항의에 나서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껄떡하게 이미 김 대의원에 대해 통보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7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징계했다. 사측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병원비 수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려 한 것을 김 대의원이 폭로했다는 게 이유였다.(<노동자 연대> 제 325호 관련 기사, 현대중공업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하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주장이 ‘유언비어’라고 우기기만 할 뿐 근거를 대지 못했다. 오히려 김 대의원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증거 자료(녹음 파일)가 있었다. 더구나 2014년 노사 합의에 따르면, 사측은 산재 발생 시

병원비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측은 김 대의원에겐 반성문(시발서)을 요구했다. 김 대의원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시도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분노했다. 현대중공업지부가 사측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부서를 기반한 조직인 ‘분과동지연대회의’ 소속의 대다수 분과 동지회들이 연명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5분과 대의원들이 발의한 징계

반대 서명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와 노동조합의 항의,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징계 반대 여론을 의식한 사측은 함부로 더 심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사측은 전책은 유지해, 징계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김 대의원이 항의하자, 사측 담당자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기존 징계 통지를 유지한다고만 했다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구실일 뿐, 징계의 진짜 이유는 김 대의원을 본보기 삼는 것에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김경택 대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활동가에게 징계는 어쩔 수 없는 훈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부당한 징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소송 등을 벌이며 끝까지 싸울 겁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김경택 대의원의 부당 징계 철회 투쟁이 승리하고, 나아가 사측의 징계 남발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자.